

# ‘전후배상’ 추가제기 검

113 1991. 8. 15

## 정부, 일본에 “임금체불등 새 사실 드러나 불거 65년협정 ‘종결’ 조항 발 묶일수 없

### 6월 양국 외무부 국장회의때 첫 거론

정부는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일본측의 전후배상 처리가 지난 65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추가적인 대일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7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3~4년 전부터 일본에 의한 한국민의 사(在日) 제이주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강제노역을 당한 한국민들의 미지급 임금 3천

억엔이 일본 은행에 그대로 공탁돼 있는 등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지금까지 청구권 협정 제2조1항, 즉 두나라간 및 그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조항에 발이 묶여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와는 전혀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방침 아래 정부는 지난 6월말 제주에서 있었던 제1차 한-일 외무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한국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문제를 일본측에 거론했는데, 이는 외교 통로를 통한 첫 문제 제기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전후 ‘보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방침이 완강한 점과 새로운 ‘청구권’ 문제 제기가 미래 지향의 동반자관계로 성숙돼가고 있는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한 법률적이고 외교 전략적인 검토작업을 마친 뒤 본격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본에서 발견되거나 보도되는 전후배상과 관련된 각종 사실들에 대해 일본 외무성 쪽에 진위여부와 자료 인도를 적극 촉구하도록 주일대사관에 훈령을 내렸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여론 등을 감안하면서 외무 당국간 고위 정책협의회와 아주국장 회의 등을 통해 일본측에 전후배상 문제를 신중하

게 거론할 방침이다.

일본 문제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65년 청구권협정 때는 피해자인 한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가해자인 일본이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한-일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종결이 아닌 일단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발견될 경우 청구권은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일본대사관에 배상등 요구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회장 김중대·55) 회원 3백여명은 14일 낮 12시에 서울 동대문 운동장을 출발해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까지 평화행진을 벌인 뒤 대사관을 찾아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 등 5개항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